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 무마 특혜 행정, 실체 드러냈다

공직자 48명, 시·구 의원 5명 과태료 무마 '특혜' 연루 단속 검수 권한 '무분별', 감독 '허술'...고삐 풀린 기강 공직자 68명 무더기 징계 불가피...경찰 수사 '가시권'

광주 서구가 지역 정·관계 인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 과태료 면제의 부당 특혜를 내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목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단속 무마 정적이 만연화되며 현직 시 의원부터 청원경찰까지 두루 과태료 면제 특혜를 내었다. 특혜성 다분한 과태료 면제 처분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무더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신뢰·공정과 함께 무너진 행정 권위는 경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다.

◇ 공직자 48명·지방의원 5명 과태료 무마 '특혜'

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 관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 공직자는 48명이다. 이 중 공무원은 5급 5명, 6급 이하 29명이었다. 5급 이하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했다. 공무원·청원경찰 등

(14명)도 48명에 이른다.

관련 직무를 맡아 자신의 과태료 처분을 스스로 무마한 공직자도 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 5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고위직 포함)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누린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전직 의원 1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 의회에 입성,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 검수 권한 '무분별', 감독 '허술'...고삐 풀린 기강

규정 상, 중복 단속·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의 이유로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담당 공무원 1명에겐 있다.

그러나 서구는 주·정차 단속 관리 전산시스템상 삭제 권한을 공무원 수명에게도 부여, 과태료 처분 행정에 구멍이 생겼다.

담당 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삭제 권한 부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연 평균 16만 건 이상의 단속 자료를 공무원 1명이 모두 검수하기 쉽지 않은 만큼, 묵인한 측면도 있다.

교통지도과는 민원 대응, 업무량과 중 등의 인식이 강한 탓에, 행정 사무·전산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신입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자리(15명)를 메우고 있다.

반면 과 직원 39명 중 24명(61.53%)을 차지하는 공무원이 현장 단속 등 실무를 도맡고 있어, 내부 통제·감독

이 쉽지 않았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공무원들이 신분·직무상 지위가 높은 공무원·구의원의 청탁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현직 직급 고하를 떠나 단속 무마 정적이 관행화 된 만큼, 공직 기강 고삐 자체가 풀렸단 비판은 피할 수 없다.

◇ 공직자 무더기 징계 불가피...경찰 수사 '가시권'

시 감사위는 과태료 단속 무마 정적을 한 공직자 48명(자가 면제자 1명 포함)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서구에 통보했다. 지방의원·동료 공직자의 청탁에 응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해 준 16명은 징계와 함께 수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과태료 처분 면제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결정하고자 만든 '의견

진술심의회'를 부실 운영한 공직자 5명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시 감사위는 과태료 처분을 면한 2만5159건 중 4169건은 행정 제약을 과도하게 해석, 무분별하게 면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확인된 미부과 과태료 규모는 1억2700만여 원(3590대)에 이른다. 그러나 잃은 것은 과태료 수입보다도 행정 신뢰다.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꼬박꼬박 냈던 시민들로서는 거세게 반발할 수 밖에 없고, 신뢰·공정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 행정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수사도 피할 수 없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내사(직무유기 혐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시 감사위 결정에 따라 공식 수사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동취재본부



나무 심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가슴기살균제, 석면, 라돈침대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이후 석면피해자를 위한 추모의 숲 조성과 함께 매년 서너차례 피해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흥업소 코로나' 비상...경찰, 불법영업 2주 집중단속

운영시간 위반·명부 미작성 등 중점 점검

전국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4차 유행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레저용 선박이 어선용 면세유 사용하다 적발

완도 해경·군, 어선용 면세유 부정사용 레저선박 적발



전남 장흥 해상에서 어선용 면세유를 레저용 선박에 부정 사용한 50대 선장이 해경과 군의 합동 수사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5일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운항한 혐의(수산자원관리

법·면세유부정사용 등)로 A(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장흥군 노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2급 레저용으로 등록된 선박에 고기잡이용 어선에만 사용이 가능한 면세유를 넣

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의 선박에는 면세유 400가 보관돼 있었으며 연료통에도 가득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선박은 해상 사고 등에 대비해 식별이 가능한 '선박 식별 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순찰을 하던 중에 노력도항에 무단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운항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93여대에 CCTV와 영상장비(TOD) 추적을 의뢰해 운항기록 등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가 면세유를 확보하게 된 경위와 선박의 실제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전남도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남도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불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행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조립목을 포함한 산물을 몰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